



베네수엘라 개헌안 부결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의회가 발의한 개헌안이 지난 12월 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박빙의 차이로 부결됐다. 개헌안 통과를 자신했던 차베스 대통령이 투표 다음날 패배를 시인함으로써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개헌안 부결은 차베스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베네수엘라 정국 전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트랜스라틴》은 이러한 현정세에 주목하고, ‘베네수엘라 개헌안 부결의 원인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3편의 글을 신는다.

제임스 페트라스의 글은 2007년 12월 6일 자신의 홈페이지 (<http://petras.lahaine.org>)에 발표한 것으로 좌파 시각을 대변하며, 후안 루이스 에르난데스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특별기고문은 우파 시각을 대변한다. 김병권의 글은 차베스와 집권세력의 시각에서 이번 개헌 실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편집자 주]



■ 베네수엘라 개헌안 국민투표: 평가와 향후 전망

제임스 페트라스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주의계획 실현을 위한 개헌안이 근소한 표차(총투표수 9백만에서 1.4%의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유권자의 45%가 기권했으므로, 28%만이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한 점진적 변화에 반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로 재정과 생산의 주요부문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베네수엘라의 시도는 타격을 받았으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의석수는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행정부의 권한 역시 약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의 근소한 승리는 차베스 대통령의 사회경제 개혁을 저지하고, 정권을 빼앗거나 여의치 않으면 낡은 엘리트 권력 브로커들과 타협하게 만들려는 저들의 노력에 추동력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미 차베스 진영 내부에서 그리고 반대진영의 이질적인 정파들 간에 토론과 논쟁이 시작되었다.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는 2006년 선거에서 차베스를 지지한 유권자 가운데(63%가 지지했다) 3백만 이상이 이번 국민투표에서 기권한 이유이다. 우파는 30만표를 더 얻었을 뿐이다. 이 표는 차베스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의 표일 뿐, 적극적인 우익중산층 유권자의 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2백7십만이 넘는 차베스 지지자들이 기권한 것이다.



12월 3일 개헌안 부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현행 헌법과 개헌안의 사본을 들고, “이 개헌안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패배의 원인 분석

이번 차베스의 개헌안이 그렇지만, 사회주의로 전환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때마다, 우익 반동세력과 이를 추종하는 (‘진보적인’) 중산층은 일상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결집한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민중과 조직원들은 방대한 반대진영과 맞서야 했다. 해당 부문에서 실권을 장악한 반대진영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상당수의 미국 정부 요원들(CIA, AID, NED, 대사관 정무담당관), 이들 휘하의 정보원들(비정부기구, 학생모집과 교육프로그램, 신문사 편집인, 대중매체 광고주),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상공회의소(개헌반대 광고, 선전, 시위 비용 지원).



11월 28일 방독면을 쓰고 반개헌투쟁에 나선 카라카스의 메트로폴리탄 대학생

2) 베네수엘라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공인연합회(FEDECAMARAS), 상공회의소, 도소매상인들(이들은 개헌반대 운동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었고, 자본유출을 조장했으며, 사재기와 암시장을 통해서 생필품의 품귀현상을 야기했다).

3) 90% 이상의 민영대중매체(싼한 거짓말로 끊임없이 악의에 찬 선전을 해댔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아이들을 부모 품에서 빼앗아 국가가 통제하는 학교에 수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미국의 대중매체는 너나없이 이런 유언비어를 그대로 보도했다).

4) 추기경에서 지방의 본당 신부까지 포함하는 가톨릭 성직자 전원(근엄한 강론대에서 개헌반대 설교를 했다. 게다가 몇몇 주교는 성당을 폭력적인 극우파의 본부로 내준 결과,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려던 차베스파 석유노동자가 살해당하기도 했다).

이상의 반개혁진영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하거나 유혹한 사람들은 의회대표단의 극소수 ‘자유파’, 두어 명의 주지사와 시장, 예전 급진좌파(이들 중 일부는 40년 전에 게릴라였다) 몇 사람, ‘홍기(紅旗)’그룹의 예전 마오주의자 몇 사람, 트로츠키주의 노동

조합 간부 몇 사람과 분파들이다. 상당수의 사회민주주의 학자들은(Edgar Lander, Heinz Dietrich) 공색한 변명으로 인류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개헌에 반대했으며, 차베스가 ‘독재자’나 ‘보나파르트’ 성향을 지녔다고 미친 듯이 공격하던 엘리트들의 선전활동을 학문적으로 포장했다.

베네수엘라 엘리트와 미국정부가 앞장선 이질적인 정파연합의 작전은 기본적으로 상투적인 이야기를 연신 두들겨대는 것이었다. 즉, 대통령 연임조항 개정, 국가 비상시(2002년에서 2003년에 발생한 쿠데타와 축출 같은 사태)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권한, 지방관리 임명,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이행은 ‘쿠바식 공산주의’를 실시하려는 음모라는 것이다. 우익과 자유파는 무제한 연임조항(세계적으로 의회법에서 채택하고 있다)을 들어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폭군의 ‘권력 장악’ 음모라고 선전했다. 베네수엘라의 민영대중매체는 물론이고 미국의 CBC, NBC, ABC, NPR, 뉴욕타임즈, LA타임즈, 워싱턴포스트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 1999년 헌법은 미국이 후원하는 민간엘리트와 군부 합작의 쿠데타와 권좌 축출(2002~2003), 수십 명의 콜롬비아 민병대 암살단의 침투와 엘리트 동원(2005), 콜롬비아 비밀경찰이 카라카스 중심부에서 베네수엘라-콜롬비아 시민을 납치한 사건(2004), 전임 국방부장관 바두엘(Baduel)의 공공연한 쿠데타음모로 유명무실해졌다.

우익 진영은 반개혁 정파연합을 결성하고,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여 상이한(때로는 중첩되는) 사회그룹을 집중 공략했다. 미국은 학생을 모집하여 거리의 투사로 양성하는 일에 집중했다. 훈련비용 수십만 달러는, 유고슬라비아, 우크라이나, 조르지아에서 그랬듯이, AID와 NED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해소’(다크유머인가?) 단체에 지원했다. 또한 오래전부터 수하노릇을 해온, 고사

직전의 ‘사회민주주의’ 노동조합연맹, CTV, 대중매체, 기타 엘리트동맹세력에게 자금을 살포했다. 베네수엘라 상공인연합회(FEDECAMARAS)는 중소기업부문과 고액연봉의 전문직, 중산층 소비자를 공략했다. 우익 학생들은 거리 폭력의 기폭제였으며, 캠퍼스 안팎에서 좌익학생들과 충돌했다. 대중매체와 가톨릭교회는 대중들에게 섬뜩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사회민주주의 학자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동료들이나 좌파 학생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국민투표에 기권하도록 유도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사이비 마르크시즘 논리를 동원하여 ‘보나파르트와 다를 바 없는 차베스’는 ‘자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떠벌이고 돌아다님으로써 노동조합을 분열시켰고, 미국이 훈련시킨 학생들을 자극했으며, CIA의 지원을 받는 CTV 노동조합 우두머리들과 함께 개헌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상이 개헌운동 기간에 사악한 정파연합이 행한 일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정파연합은 국민투표가 끝난 후에는 불화를 드러냈다. 수리아 고베르노르 로살레스(Zulia Governor Rosales)가 이끄는 중도우파는 차베스 정권의 ‘중도파’ 각료와 다시 ‘만남’을 갖고 ‘대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전 국방장관 바두엘(사이비 좌파가 선호하는 인물)이 이끄는 강경 우파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차베스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회를 해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아직도 저들은 개혁법을 제정할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이다. 좌파는 우익이 발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일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레닌과 트로츠키를 들먹이며(레닌과 트로츠키가 무덤에서 한탄할 일이다.) 임금인상 파업이나 조직하고 있다.

개헌운동과 구조적 취약성

우익이 근소한 우세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베스파 개헌운동의 오류와 중대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1) 개헌운동

개헌운동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었다. 개헌 주도자인 차베스 대통령은 2달에 걸친 개헌운동 기간에 몇 주를 해외에서(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이란) 보냈다. 가장 열성적인 대변자가 개헌운동에서 빠진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우파에게는 호재이지만 지지대중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쟁점에 끌려다녔다.

콜롬비아 반군의 포로교환 중재에 나섬으로써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으나, 예상했듯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이 도발적인 비난과 독설을 퍼붓고 느닷없이 중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각한 외교마찰로 번졌다. 또한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허울뿐인 스페인 국왕과 설전을 벌임으로써 엘리트가 사주한 생필품 사재기와 인플레이션 같은 국내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수많은 차베스파 활동가들은 개혁의 긍정적 측면을 홍보하지도 못했고, 대중매체와 본당신부들이 유포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아이들을 부모 품에서 빼앗는다’는 유언비어)도 집집마다 돌아



2007년 11월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에서 차베스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에게 “거 입 좀 다 물어”라고 말하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국왕(사진 중앙)

다니며 반론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누가 봐도 유언비어가 분명하므로 저들을 고발하면 충분하다고 쉽게 생각했다. 최악은, 일부 ‘차베스파’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지도 조직해내지 못했다.

개헌운동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 확보가 중요한데, 민영대중매체에게 동등한 시간과 지면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도심의 대중시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빈곤층을 위한 단기 충격요법(태생적인 지지층의 분노하게 만든 우유 품귀현상과 같은 당면 현안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다.

2) 구조적 취약성

차베스 대중 지지층의 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과 주택부족이 하나요, 2007년 후반기에 들어와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통제불능처럼 보였던 인플레이션(18%)이다. 특히 비공식부문의 자영업자 40%는 물가상승분을 보상받지 못했고, 생활형편도 개선되지 않았다.

분유, 고기, 설탕, 콩과 같은 식료품은 민영상점이나 공공상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영농기업가들은 생산을 거부했고 대형소매상들은 판매를 거부했는데, 이유는 국가의 가격통제(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로 부당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입을 꺼려한 정부는 수억 달러의 식료품을 수입했으나 대중소비자들은 구경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 판매가격도 일정하지 않았다.

도매상인과 소매상인들은 낮은 이윤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반개혁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재기를 하거나 수입품의 상당 부분을 암시장에 넘기거나 고소득자들이 이용하는 슈퍼마켓에 공급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계급의 수입이 증대한 결과,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한 수요의 급증했으나 생산성과 투자와 생산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자본가계급은 투자회수, 자본유출, 사치품 수입, 중장기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매달렸다(이들 중 일부는 최근 마이애미 부동산거품의 붕괴로 속을 태우고 있다).

어중간한 국가간섭과 극단적인 정치수사는 대기업의 저항을 야기하고 자본유출을 심화시켰다. 반면에 대체생산과 분배제도 발전은 극히 미약했다. 말을 바꾸면, 인플레이션, 물자부족, 자본유출 같은 위기 조짐은, 민관협력으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현행 볼리바르 혼합경제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대자본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반발했다. 차베스 정부와 맺은 암묵적인 ‘사회 계약’을 파기하거나 거부한 것이다. 사회계약에서 암묵적인 것이란 고이윤과 대중의 소비증가와 고용확대를 위한 고투자를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였다. 이어, 베네수엘라 대기업은 미국 대기업의 강력한 지원과 간섭에 힘입어, 헌법개정안 부결을 위해 대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다음 단계는 차베스 정부의 사회민주주의 각료들과 협약을 맺거나 경제위기 심화설, 쿠데타설과 같은 새로운 공격수단을 동원하여 동력을 상실한 사회경제 개혁을 뒤엎으려고 한다.

정책 대안

차베스 정부는 무조건 기본적인 국내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고, 기권율은 높아졌으며, 대중적 기반은 붕괴되고 있다. 이를테면, 2년 전 홍수로 진흙탕에 빠진 빈곤층은 무능한 정부기관과 약속불이행 때문에 아직도 집 없이 살고 있다.



개헌반대 집회에 모인 반차베스파 시민들

정부는 민중의 감독 하에 신속히 개입하여, 모든 식품유통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 부두노동자, 운송노동자, 소매상, 지역협의회를 동원하여, 수입식품이 반개혁적인 도매상, 대형소매상 소유주, 소규모 암시장거래인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가게 진열장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식량 생산과 관련하여 대농장주와 축산업자들로 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대규모의 몰수와 투자, 그리고 구판장 개설을 통해 사업자 측의 생산과 공급 스트라이크를 극복해야 한다. 자발적인 순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자 측의 ‘조업 거부’로 이미 증명되었다. ‘합리적인 경제 계산’을 추구하는 ‘혼합경제’ 이론은 중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다툼이 한창인 시점에서는 무용하다.

생산과 분배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정부는 자금세탁에 깊이 관여하고, 자본 유출을 조장하며, 국내시장을 위한 생필품 생산보다는 투기를 부추기는 민간은행을 접수·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헌의회 헌법은 구조개혁(적어도 자본이 지배하는 혼합경제를 넘어서려는)을 위한 법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 그런데 지나친 ‘울법주의’에 사로잡힌 차베스 정부는 또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현행 구조개혁법을 경시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으로도 2006년 선거에서 차베스를 지지한 전체 유권

자 2/3의 요구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끝난 후, 차베스 진영 내부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중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층 노동자, 노동조합, 공공부문 피고용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물가인상과 생필품 품귀현상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기권한 것은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 부재 탓이지, 우파나 자유파의 선전 탓은 아니다. 이들은 우파도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다만 품귀현상, 인플레이션, 구매력 저하라는 삼중고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다. 대다수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입은 공식부문의 노동조합원들의 경우와 달리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교섭을 통한 임금인상도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에서(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은 빈곤층에게는 최악의 재앙이며, 불만의 주된 이유이다. 비록 우파나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면 대중으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게 통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좌파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적은 거의 없었는데(통탄할 일이다), 베네수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내각, 정당, 사회운동의 지도부의 입장은 수없이 많지만, 양극단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한쪽은 우세를 점하고 있는 국민투표 선호 입장으로 재정, 경제, 기획부 장관이 주축이다. 이들은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 투자활성화, 생산증대를 위해서 국내외 민간투자자, 은행, 영농기업인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정책수단은 자발적인 협력, 재산권의 보장, 세금환급, 유리한 조건의 외환거래, 그리고 장려책과 몇 가지 규제를 통한 자본

유출과 물가(이윤이 아니다)의 통제이다. 사회주의 성향의 입장은 앞서 언급한 협력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의 정치적 곤경과 갖가지 사회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 속한 일부 사람들은 투자활성화, 생산증가, 유통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는 국유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그룹은 노동자 자주관리 평의회를 중심으로 경제를 조직하고, 새로운 ‘혁명국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그룹은 공적이고 자주관리적인 소유, 농업협동조합, 엄격하게 통제된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적 소유가 결합된 혼합국가를 주장한다.

장차 혼합경제 그룹이 주도권을 장악하면 ‘온건자유파’ 반대진영과 협정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품귀현상과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한층 급진적인 그룹의 주도권 장악 여부는 종파주의와 분열의 종식,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지도자, 즉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개헌 국민투표와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제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인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사이의 투쟁에서 발생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번역: 서라연]

제임스 페트라스(James Petras) - 뉴욕 빙햄튼 소재 뉴욕주립대학 사회학과 교수이자,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의 세인트 메리 대학 국제개발학과 부교수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개발문제에 관해 36권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냈다. 최근 저작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와 계급투쟁』, 『새 밀레니엄과 미국의 헤게모니』 등이 있다.
